



“정부 · ESCO 열린 채널로  
발전방안 공유해야”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올해 ESCO정책 자금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고, 그나마도 자금이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많은 ESCO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연계해 국공립대학이나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ESCO투자를 유도하고, 적정규모의 공공예산 확보뿐 아니라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ESCO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커지고 있지만 ESCO사업특성상 투자재원이 정부자금에 한정되어 있고 관련 기술인력도 부족하여 아직은 시장활성화가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ESCO협회 이사인 구연호 GS네오텍(주) 상무의 진단이다.

구 상무는 국내외의 에너지여건이 ESCO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따라잡기에 급급하다며 정부, 업체, ESCO협회가 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도정비나 과감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시장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무의 생각이다.

“올해 ESCO정책 자금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고, 그나마도 자금이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많은 ESCO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연계해 국공립대학이나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ESCO투자를 유도하고, 적정규모의 공공예산 확보뿐 아니라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최근 ESCO사업이 단순설비에서 복합설비화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풍부한 자금과 사업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있는 업체의 ESCO시장진입을 촉진하며 ESCO자체 시장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동남아 등지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ESCO자체의 경쟁력 확보방안이다.

구 상무는 “각 ESCO는 사업홍보 및 산학연계 등을 통한 기술력을 강화해 ESCO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 ESCO사업은 에너지절감이 필요한 사업체를 ESCO가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사업체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요구에 따라 역량 있는 ESCO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ESCO사업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입증돼 사업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업진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구 상무는 해석했다.

따라서 기술력 강화 및 고객제안 능력, 마케팅 역량 이야말로 ESCO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소가 된다는 것.

“대기업의 경우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초소재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산업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향후 ESCO는 고효율기기를 넘어 신재생에너지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ESCO는 국내 ESCO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진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 기술인력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 상무는 산학연계를 통해 R&D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고 조언했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고도의 지식산업입니다. 또한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 탄소배출권 등 환경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시장기회가 매우 높은 매력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ESCO사업의 육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ESCO가 열린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발전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 상무는 그 가교역할을 ESCO협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